

기업애로

- 01 |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소규모 음식점 「재난희망보험」 상품 출시
- 02 | 자연보전권역 제조시설 설치 가능 면적 두배로 확대
- 03 | 융·복합 기업을 막는 지식산업센터 입지 규제 개선
- 04 | 소규모 제조기업의 관내 이전시 변경등록 불가 규제 개선
- 05 | 고용허가제 시행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고용애로 해소
- 06 | 불가했던 개발제한구역 공장 제조시설 증설, 틈새 규정으로 해결
- 07 | 조례개정을 통해 외투기업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확대



2023 경기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집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소규모 음식점 「재난희망보험」 상품 출시

 추진부서 | 안산시 위생정책과 ☎ 031-481-3975

개선배경



- 100㎡이상 음식점은 「재난안전법」 제76조의5에 따라 저렴한 보험료와 폭넓은 보장이 되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있어,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덜어 주고 있음.
- 2021년에 전국 음식점 화재는 총2,456건으로 약 101억 원 정도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전국 음식점 85%인 약75만 개소(22년 8월 행정안전부) 소규모 음식점(100㎡미만)이 가입 할 수 있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이 없는 상황으로, 저렴한 보험료와 화재 등 위험에 대비해야 할 보험상품이 필요

개선내용



개선 전

소규모(100㎡미만) 음식점은 「재난안전법」 제76조의5에 따라 재난희망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대상이 아니라 사보험을 제외하고, 저렴한 보험료로 화재 등 타인의 생명·재산상의 손해배상에 대비 할 수 보험이 없었음.



개선 후

2023년 재난배상책임보험 실무편람 개정을 통해 소규모(100㎡미만) 음식점이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재난희망보험' 출시.
이에 저렴한 비용으로 소상공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예측 할 수 없는 재난에 대한 대비가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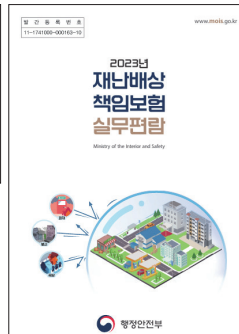
개정된 법령(지침)내용

재난희망보험(임의보험) 상품 출시(22.9.1)

-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100㎡ 미만 소규모 음식점이 자율적으로 가입 가능한 별도 '선택보험' 상품 출시
- 재난배상책임보험과 보장 내용은 동일하나, 저렴한 비용으로 가입 가능

구분	재난배상책임보험	재난희망보험	비고
가입 대상	100㎡ 이상	100㎡ 미만	
보장 내용	1인당 대인 1.5억, 1차고당 대물 10억	화재·물고기·폭발	
보험료	최저 2만원부터	약 2만원	

· 개별손해보험 단체 판매 상품



추진과정



- '21.2. 소방서 등 유관단체 · 기관 연계를 통한 음식점 화재 실태 조사
- '21.3. 소규모 음식점 재난배상책임보험 출시 가능성 등 보험사와 협의
- 소액 보험료이면서 보장성이 커서 보험사에서 상품 판매 꺼림
- '21.9. 안산시 제도개선 과제 제출(전국 최초)
- 소규모 음식점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제안
- '22.5. 중앙부처 협의 결과 '일부 수용'
- 소규모 음식점이 자율적으로 가입 할 수 있는 보험상품 출시 검토
- '22.9. 소규모 음식점 재난희망보험 상품 출시
- 연 2만원으로 재난 피해보상이 가능한 보험상품 출시

개선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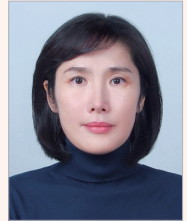


- 전국의 음식점 중 약 85%를 차지하는 소규모(100㎡미만) 음식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게 재난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부담감 완화 및 국민의 피해 보상 보장





소규모 음식점 재난희망보험 출시로 재난보장 ok !



 경기도 안산시 위생정책과 김애임 ☎ 031-481-3975

소규모 음식점(100㎡미만)은 매일 불을 사용하는 화재 취약시설임에도 가입가능한 재난배상보험이 없습니다. 반면 100㎡이상 음식점(25%)은 월 2만원의 저렴한 보험료와 대물 10억까지 보상해주는 재난배상책임 의무보험이 있어 영업주의 피해배상 부담을 덜어 주고 있습니다.

이에 외식문화 증가, 1인가구 증가 등으로 이용률 높은 소규모 음식점(75%)이 가입 가능한 재난희망보험을 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영업주뿐만 아니라 이용하는 시민까지 재난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어 재난취약시설 사각지대를 해소시킨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 상품은 보험사 측에는 저렴한 보험료에 비해 보장액이 커서 적극적으로 판매하지 않지만 많은 소상공인이 가입해서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연보전권역 제조시설 설치 가능 면적 두배로 확대

 추진부서 | 여주시 일자리경제과 ☎ 031-887-3031

개선배경



-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는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의 공장(지식산업센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신설(제14조의3에 따른 제조시설설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증설 또는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관련 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27조의2

(원칙) 공장건축면적 500㎡이상 공장의 신설·증설·이전·업종 변경 금지

(예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에 따르면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의 신·증설 또는 이전이 가능한 경우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음.

[기타지역]

- 현지 근린공장, 첨단업종 공장의 신·증설, 기존 공장의 증설
(신·증설 결과 공장 건축면적이 1,000㎡이내)
- 도시형공장, 건축자재업종 공장, 중소기업으로 신·증설 결과 1,000㎡이내
(이하 생략)

- 공장 운영 시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의 양은, 공장건축(제조)면적이 아닌 업종별 생산시설과 공정에 따라 결정되므로 환경 관련법이나 규칙에서 규제를 하여야 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자연보전권역의 공장건축(제조)면적을 일률적으로 1,000㎡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규제라고 판단, 예외규정 적용 면적 확대 건의코자 하였음.

개선내용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2023. 4. 11.)
– 시행령 [별표3] 제3호나목 중 “1천제곱미터”를 “2천제곱미터”로 한다

개선 전

나. 도시형공장 중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자연보전지역의 지정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공장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중소기업으로 신설 및 증설 결과 **공장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선 후

나. 도시형공장 중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자연보전지역의 지정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공장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중소기업으로 신설 및 증설 결과 공장건축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추진과정



- '20. 9. 중소기업 옴부즈만 시스템 신고(산자부)
- '20. 7. 경기도 규제개혁과 기업 현장 간담회 건의
- '21. 4. 경기도 규제개혁과 건의
- '21. 5. 중소기업 옴부즈만 시스템 신고(산자부)
- '22. 7. 경제활성화를 위한 기업규제 현황조사 제출
- '23. 3. 기업현장 맞손토크 실무회의 건의, 경기도 규제개혁과 중앙과제 건의
- '23.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2023. 4. 11.)

개선효과



- 경기도 내 자연보전권역 8개 지자체*의 공장 증설을 통한 중소기업 경영애로 해소와 더불어 신규 기업 유치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

* 여주, 이천, 광주, 양평, 가평, 용인, 안성, 남양주



융·복합 기업을 막는 지식산업센터 입지 규제 개선

 추진부서 | 안양시 정책기획과 ☎ 031-8045-2211

개선배경



- 2018년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통해 지식산업센터 입지규제로 애로를 겪고 있던 기업을 발견. 동 기업은 자사의 IoT 기술을 타사 제품에 응용하는 융복합제품을 만들고 판매하는 제조기업임.
- 그런데 산업집적법령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제조기업이 자사 생산 제품만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음. 즉, 자사의 기술과 타사 제품을 융합한 '융복합제품'은 판매할 수 없는 상황임.
- 따라서 기업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지식산업센터에서 퇴거하든지, 추가로 자금을 들여서 판매장으로 이용할 별도의 사업장을 얻는 것 뿐으로, 영세한 중소기업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음.
- 이는 빠른 산업환경의 변화를 포용하지 못한 입지규제라고 판단하게 됨. 4차산업혁명의 핵심은 기술을 기존 제품에 접목시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융·복합'의 심화이고 현재는 물론 앞으로 수없이 많은 융·복합 기술이 창조될 것이기 때문임.

개선내용



개선 전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의 융·복합 제품 판매가 불가함에 따른 기업의 퇴거 위기 발생



개선 후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2조 개정으로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의 융·복합 제품 판매가 가능해졌음

-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2조 개정
 - ☞ 공장의 부대시설에서 판매할 수 있는 품목의 범위를 해당 공장의 생산제품과 결합된 제품(산업융합 신제품)으로 확대

추진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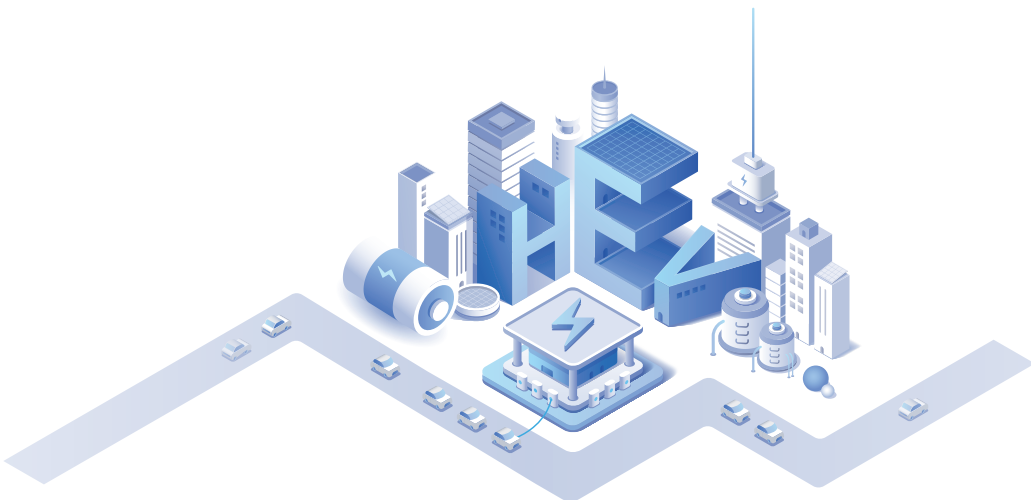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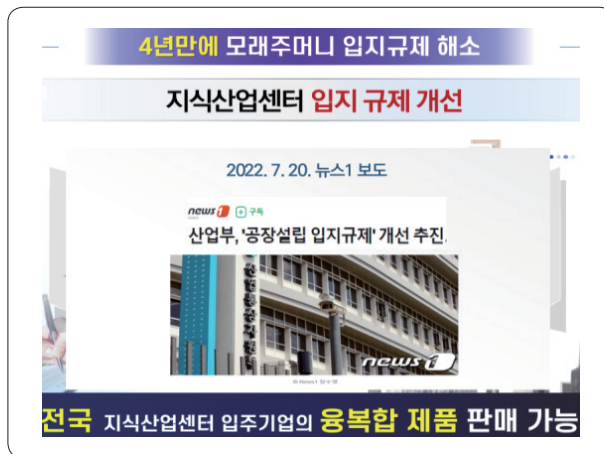


- '18. 12.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통해 규제 발굴
- '19.~'22. 중앙부처 건의(10회)와 소통(32회), 기업과의 소통(67회) 추진
- '23. 5.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2조 개정

개선효과



- 국내 융·복합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융·복합의 핵심 기술인 IoT사물인터넷 관련 세계시장(1,578조 규모) 진출 기대



소규모 제조기업의 관내 이전시 변경등록 불가 규제 개선

 추진부서 | 안양시 정책기획과, 기업경제과 ☎ 031-8045-2211

개선배경



- 면적 500㎡ 미만의 소규모 제조기업(공장)은 큰 공장과는 달리 같은 지자체 내에서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 변경등록 항목에 '공장소재지'가 없어 변경등록이 불가능했음. 즉 기존 공장의 등록을 취소한 후 신규등록을 해야하는 상황임. 예를들어 바로 옆 사무실로 이전해도 등록취소 후 신규등록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이행해야 했음.
- 신규등록으로 처리되면, 등록면허세도 다시 납부해야 하고, 공장등록증상의 공장 운영기간이 실제보다 짧게 기록되어 각종 입찰에서 불리해지는 등 많은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실정으로 이사를 자주하는 중소기업에게 특히 불리한 규제임.

규제 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공장등록신청서)

④ 제2항에 따라 등록된 공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 관하여는(생략)

1.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업종
3. 공장의 증설

회사명, 대표자 성명,
시설면적...

'공장 소재지' 없음

개선내용



개선 전


소규모 제조기업이 관내 이전시 변경등록하지 못 하고 등록취소 후 신규등록해야 함에 따른 다양한 불편 발생



개선 후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12조 개정으로 소규모 제조기업이 관내 이전시 불편 없이 변경 등록할 수 있게 되었음

-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12조 개정

 **소규모 공장의 변경 등록**
대상 항목에 '공장소재지' 추가

2023. 5. 22. 개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공장등록신청서)

④ 제2항에 따라 등록된 공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 관하여

- (생략)
1.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회사명, 대표자, 성명, 면적...)
 2. 업종
 3. 공장의 증설

4. 공장 소재지 <신설>

추진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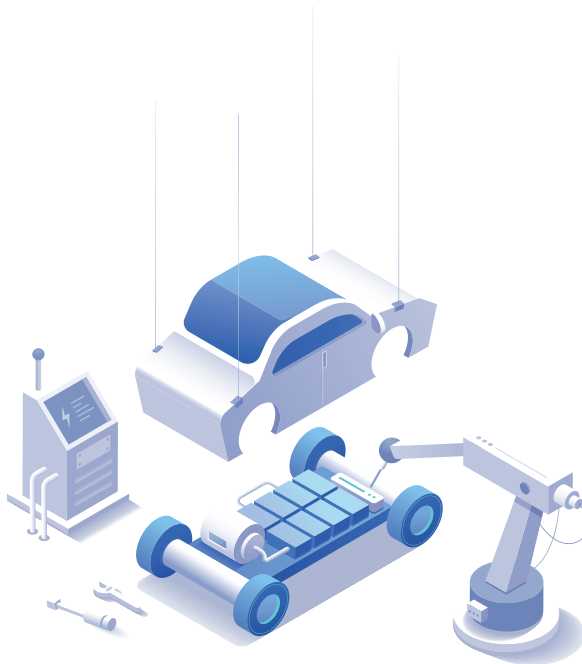


- '19. 4.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통해 규제 발굴
- '19. 4~'22. 3 중앙부처 건의(6회)와 소통(20회) 추진
- '22. 3. 「안양시-행정안전부 규제혁신 현장협의회」개최 등 노력
- '23. 5.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12조 개정

개선효과



- 소규모(500㎡ 미만) 공장의 관내 이전시 행정절차 대폭 간소화로 전국 약 8만 개 소규모 제조기업(공장)의 행정부담이 크게 해소
- 등록면허세 이중납부 방지, 각종 입찰시 중요한 지역 내 기업 운영이력 유지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기대





규제혁신의 선도도시, 안양으로 오세요!



 경기도 안양시 정책기획과 권구현 ☎ 031-8045-2211

안양의 이야기를 대표로 전하게 되어 무척 영광스럽습니다. 시는 4년에 걸친 철전 팔기의 노력으로 기업의 발목에 달린 무거운 모래주머니 같았던 「입지규제」를 해결하여 전국의 중소기업을 살렸습니다.

첫 번째, 융복합 기업의 발목을 잡는 지식산업센터 입지규제를 개선했습니다. 규제로 인해 자사의 기술을 타 사 제품에 융합한 ‘융복합제품’을 판매할 수 없어 사업을 포기할 위기에 처한 기업의 애로를 발굴한 후 4년의 노력 끝에 2023년 5월 산업집적법 시행 규칙 개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제 전국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이 스마트 시계, 스마트 조명과 같은 융복합 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소규모 공장의 관내 이전시 주소지 변경등록 불가 규제를 개선했습니다. 바로 옆 사무실로 이전해도 ‘변경등록’하지 못 하고 기존 공장을 등록취소 한 후에 신규 등록하게 됨에 따른 등록면허세 재납부, 공장운영기록 삭제 등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사를 자주 하는 중소기업에게 특히 불리한 이 규제도 개선했습니다. 이제 전국 소규모 제조기업이 불편 없이 관내에서 변경등록할 수 있습니다.


안양은 명실상부 규제혁신의 중심 도시가 되었습니다. 안양시 규제혁신의 차별성은 무엇일까요? 첫째, 규제혁신에 대한 리더의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입니다. 규제개혁은 언제나 최우선 국정과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차원의 추진은 쉽지 않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되던 기존 규제를 파헤치고 이것에 도전해야 하는 규제혁신은 어디를 가나 ‘불편한 존재’입니다. 여러 곳에서 싫은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안양은 기초지자체로는 최초이자 유일하게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전국 최고 수준의 직원 인센티브를 시행하는 등 탄탄한 지원체계를 갖추고 이를 동력으로 과감하게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싫은 소리를 듣더라도 ‘국민 전체에게 혜택을 주는 규제개혁’을 씩씩하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로 추진 환경을 조성해주신 최대호 시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둘째, 안양은 규제혁신에 진심입니다. 사업부서가 아닌 규제개혁팀이 직접 규제를 발굴·개선하여 다년간 우수사례를 창출하는 전국 유일 지자체입니다. 안양은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걸까요? 규제혁신이 기업과 국민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며 나아가서는 국가를 살리는 절실한 미션이라는 것을 다년간의 성과를 통해 현장에서 직접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지난한 규제개선 과정 속에서도 칠전팔기의 정신으로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통해 발굴한 규제 개선 건의가 매년 수용되지 못하고 좌절되었으나 끊임없는 기업과의 소통으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이를 적극적으로 전달하며 결국 규제부처로부터 수용의견을 이끌어냈습니다.

감사할 분들이 많습니다. 규제개혁팀의 든든한 네비게이션 정소영 팀장님을 비롯하여 적극행정·규제혁신을 위해 노력하는 안양시 전 직원들에게 감사합니다. 특히 적극적으로 지방규제개혁을 지원해주시는 경기도 규제개혁과에 감사드립니다. 규제 업무는 할수록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가치있는 일이라 어려운 것이겠죠? 전국의 규제 업무 담당자분들 응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혁신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계시는 전국의 기업을 응원드립니다. 규제혁신의 중심도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전국 최고 스마트 혁신도시인 안양이 여러분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안양으로 오세요! 감사합니다.

고용허가제 시행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고용애로 해소

 추진부서 | 남양주시 법무담당관 ☎ 031-590-7310
남양주시 기업지원과 ☎ 031-590-2736
남양주시 건축과 ☎ 031-590-1384

개선배경



-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주의 불법 가설건축물 등을 외국인 노동자 숙소로 제공할 경우 고용 허가를 불허하는 방침을 시행중임
 - 관련 매뉴얼에는 사업장 건물 등을 주거시설로 제공하는 경우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숙소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주가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를 득하려면, 건축물대장상 용도란에 "기숙사·숙소"로 기재되어 있어야만 가능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건축물대장 작성 시 용도란에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 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용도를 적고, 괄호 안에 구체적인 명칭을 표시하고,
 - 영 [별표 1]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용도인 경우에는 영 [별표 1]에 규정된 용도 중 가장 유사한 용도를 괄호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영 [별표 1] 17. 공장의 부속용도(하위 목)가 존재하지 않아 건축물대장 용도란에 기숙사(숙소)와 가장 유사한 용도(구체적인 명칭)를 기재할 수 없어, 외국인 근로자 고용 및 인력수급이 어려워 중소기업 경영에 애로 발생

[피해 사례]

- 사업주 A는 금속 정밀 공업 부품을 제작·납품하는 소규모 사업체로, 내국인 인력수급이 어려워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절실하여,
-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 시비(기업환경 개선사업)를 지원받아 기숙사를 건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용도’에 ‘기숙사’ 표기)를 하지 못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불가하여 기업 경영에 막대한 차질 발생

개선내용



개선 전

사업주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주거시설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건축물대장상 용도란에 “기숙사·숙소”로 기재되지 않으면 불법 가설건축물로 간주되어 외국인 고용허가를 불허하고 있음. 이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및 인력수급을 어렵게 해 중소기업 경영에 애로 발생



개선 후

건축물대장 용도란에 기숙사·숙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현황도(평면도)에 기재되어 있으면 기숙사로 인정
- 실제 현황도에 표기된 내용대로 건축물이 이용되는지 여부 등에 대한 허가권자(지자체장)의 확인이 있는 경우, 고용허가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활용 가능

※ 고용노동부 회신('23.9.11)에 따라, 건축물대장 현황도에 기숙사가 기재가 있는 경우, 기재사항 변경 없이 담당자 확인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가 가능하도록 조치

추진과정



- '22.6.30. / 8.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개정 건의 (市 → 국토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17. 공장에 기숙사·숙소를 건축물 부속용도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 추가
- '23.3.29. 중소기업 걸림돌 규제 현장간담회 개최
- (道) 규제개혁과, (市) 기업지원과, 법무담당관, 관련 기업
- '23.4.19. 기숙사·숙소 규정 합리화 (道 → 고용노동부, 국토부) 건의
- '23.5.15. 기숙사·숙소 규정 합리화 (市 법무담당관 → 고용노동부)
- 건축물대장 용도란에 기숙사·숙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현황도(평면도)에 기재되어 있으면 기숙사로 인정

개선효과



- 2개월('23. 8~9월) 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위한 **7개 기업 기숙사(숙소)인정,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 완**
- 원활한 외국인 근로자 인력 수급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을 통한 경쟁력 강화
- 불필요한 민원과 행정력 낭비 방지 및 불명확한 규정에 따른 공무원 부담 경감

불가했던 개발제한구역 공장 제조시설 증설, 틈새 규정으로 해결



추진부서 | 고양시 기업지원과 ☎ 031-8075-3577

개선배경



- 고양시의 중첩 규제는 기업유치 등 지역 발전 및 경제 성장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며, 시민·기업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에게조차 기업 활동하기 어렵다는 부정적 인식이 만연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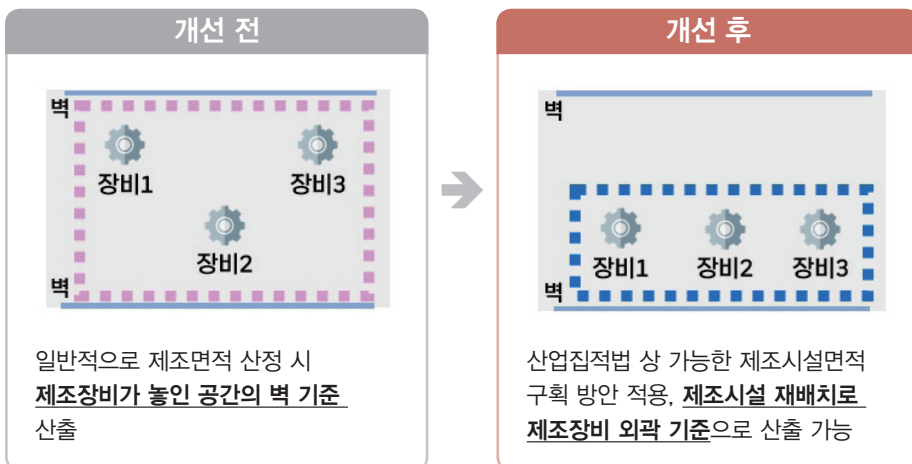
※ 고양시 중첩 규제 : 과밀억제권역(100%), 개발제한구역(42.1%), 군사보호구역(35.2%) 등

- 고양시 덕양구의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A기업은 2012년부터 꾸준히 공장 제조시설 증설을 위한 노력을 실시해왔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판로 개척 및 근로시간 52시간 제한으로 인한 생산량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제조시설 확대가 꼭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 증축 가능 면적은 '창고 등 부대시설로만 사용 가능, 제조 장비 증설은 불가'하여 실질적으로 필요한 제조시설 증설은 사실상 포기한 상태였음.

개선내용



- 유연한 법령 해석을 통해 틈새 규정을 발굴, 제조시설 증설 가능성 확인



- 일반적으로 제조면적을 제조장비 바닥 면적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나, 산업집적법상 가능한 제조시설면적 구획 방안을 적용하여 제조장비 외곽을 기준으로 제조면적 산출 가능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약칭 : 산업집적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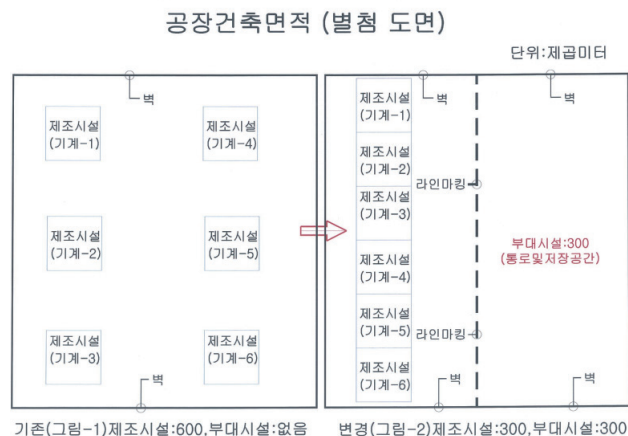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공장의 설립등) 법 제13조제1항에서 “공장건축면적”이란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

● 제조시설면적 산출 구획 관련 산업부 질의 (2019. 9. 29. 질의/2019.11.8. 답변)



Q. 별첨 도면과 같이 기존 제조시설을 밀집시키고 라인을 마킹하여 통로와 적재공간으로 사용할 경우, 통로 및 적재공간 면적을 제조시설이 아닌 부대시설로 간주할 수 있는지?

A. 해당 부분이 제조시설에 대한 관리/지원하거나 또는 창고 등으로 사용할 경우, 부대시설로 간주 가능 ⇒ 상기 2가지 사례 모두 인정(유불리에 따라 선택 가능)

- 건축 연면적 2716.91㎡ 중에 증축 927.66㎡ (제조시설면적 증설 250.92㎡)



증 축 전



증 축 후

추진과정



- '20. 6. A기업 공장증축허가(설계변경) 신청
- '20. 6. 건축 부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신청 협의
- (기업지원과 조건부회신) 사용승인 전 공장부지 증가에 따른 공장설립 승인을 득할 것
- '20.11. 기업지원과, OO기업의 개발행위(창고증축) 협의 과정에서 실제로 기업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창고가 아닌 제조시설 확장(추가)이라는 것을 인지
- '20.11. 제조시설 증설 관련 기업으로 상담 출장
- '21. 2. 관련 부서 간 실무협의를 거쳐, 공장증설승인 처리
- '22. 5. 개발제한구역 내 사용승인 처리
- '22.12. 공장 증설 승인 완료신고 처리

개선효과



- A기업은 공장 증설로 현대식 제조시설을 갖추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온라인 판로 개척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매출액 2020년 91억 → 2023년 270억(예상), 종업원 수 2020년 100명 → 2023년 130명
- 대도시 주변의 개발제한구역은 해당 사례의 적용으로 도심 내 부족한 개발가능지 확보와 기업의 이전 비용 지출 절감 효과 기대

조례개정을 통해 외투기업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확대



추진부서 | 경기도 세정과 ☎ 031-8008-4153

개선배경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조례감면을 통해 최대 15년까지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경기도는 감면기간을 7년으로 제한하는 등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저 수준의 감면만을 허용하고 있음

※ 전국 17개 광역 자치단체 중 12개 시도의 경우는 조례를 통해 최대 허용치 적용

- 경기도의 제한적 세제지원은 타지역 대비 불리한 투자환경을 조성하여 외국인 투자를 위축시키는 장애요인으로 작용, 자발적 역차별을 초래함
 - 연도별 외국인투자기업 신규등록 현황을 볼 때, 경기도는 경제 규모 및 인구수 등 외형에 비해 투자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고, 그 비중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임

〈 연도별 외국인투자기업 신규등록 현황 〉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전국	902개 (100%)	955개 (100%)	842개 (100%)	1,342개 (100%)	1,680개 (100%)
경기도	182개 (20.2%)	196개 (20.5%)	158개 (18.8%)	251개 (18.7%)	312개 (18.6%)
서울	472개 (52.3%)	498개 (52.1%)	464개 (55.1%)	664개 (49.5%)	790개 (47.0%)
인천	65개 (7.2%)	97개 (10.2%)	83개 (9.9%)	231개 (17.2%)	324개 (19.3%)

※ 서울시 쏠림현상 지속, 인천시의 비중은 지속 증가

개선내용



-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개정을 통해 외국인투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확대
 - 감면대상 : 외국인투자기업이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

〈 주요 개정내용 〉

구 분	개선 전	개 선 후
신규 취득 사업용 부동산	사업개시 후 7년 이내 : 100% 감면	사업개시 후 15년 이내 : 100% 감면
	그 다음 3년 이내 : 50% 감면	
사업양수 사업용 부동산	사업개시 후 5년 이내 : 50% 감면	사업개시 후 7년 이내 : 50% 감면
	그 다음 3년 이내 : 30% 감면	현행 유지
	사업개시 전 취득 : 50% 감면	현행 유지

※ 고용창출 등 경제효과를 고려하여 신규 취득과 사업양수 취득에 대한 감면을 차등 적용

추진과정



'23. 2. 7. 경기도지사 국내외 투자유치 확대 정책 목표 제시

'23. 3.16.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내부 검토회의 및 경기도의회 협의 *

* 신속한 조례개정을 위해 의원입법발의 추진

'23. 3.21. 업무 추진계획 수립 및 개정안 마련

'23. 4.27. 경기도의회 제368회 임시회 본회의 안건 상정 및 의결

'23. 5.17. 개정조례 공포 및 시행

개선효과



- 외투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를 통해 기술을 수반한 첨단 외국기업의 투자를 유인하고, 선진기술 도입 및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
- 국내외 투자유치 100조원 달성을 지원하여 정책추진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고, 경기도 혁신생태계 기반 조성에 기여함

경기도, 외투기업 부동산 취득세 전액 감면 15년으로 확대



경기도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부동산 취득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도세 감면 개정 조례'를 오는 17일 공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외투기업이 사업용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 전액 감면 기간이 7년에서 15년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또 외투기업이 기존 사업자로부터 공장이나 설비 등을 인수(사업양수)하면 7년까지 취득세를 전액 감면합니다.

기존에는 5년까지였습니다.

8년부터 10년까지는 취득세를 30% 감면해줍니다.

경기도는 조례 개정을 계기로 김동연 지사의 '일기 내 100조원의 국내외 투자유치' 계획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제보하기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전화 : 02-781-1234
이메일 : kbs1234@kbs.co.kr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